

# “전남 의대 용역’ 편향적 해석·소모적 논쟁 자제를”

전남도 “설립 결정 위한 용역 아냐” 당위성 확보 차원...현재 활용 불가 순천권, 오늘 ‘5자 회동’ 불참 선언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17일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와 관련한 ‘5자 회동’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편향적 해석과 소모적 논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 편향적 해석에

따른 특정 지역 유불리를 주장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소모적 논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용역 보고서는 500페이지 분량으로, 정부의 의료정책 및 의료인력 양성체계 검토, 전남도 의료 서비스 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병원 설립 시 경제성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입학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현황 분석은 의료인력 수, 상급종합병원 기준 시간(180분) 내 도달 시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간·거리 등 59개 지표로 동·서부권을 포함한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지표가 전국에 비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속병원은 동·서부권 어디에 설립 하든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민의 89% 이상이 ‘의대와 병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설립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동부권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용역 책임자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남도 전체의 의료 환경을 분석해 대표적 의료 취약지역을 확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정부에 알리기 위한 용역이

있다”며 “전남도 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 13일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용역 결과 공개 시 지역에서 편향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했으나, 일부에서 용역에 의혹을 제기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역을 공개하자마자 일부에서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주장하며 편향적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용역은 전남 의대 신설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건에서 작성돼

현재 활용할 수 없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한 만큼, 각 지역에서는 용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이날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의 정치 행위는 도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전남도가) 일반적으로 통지한 5자 회동은 불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공개된 용역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 전문가 검증 등을 거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전남도, ‘퀵스타트’ 사업 선정... 투자 활성화 기대

투자기업 대상 맞춤형 인력 공급

산업부에서 공모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전남여수산학융합원이 선정되면서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및 투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수산학융합원에서 주관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생에게는 교육훈련장려금(1인당 275만원)을 지급, 교육 수료 후 참여 기업에 취업을 연계한다.

공모에는 전국 17개 산학융합원 중 10개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전남여수산학융합원이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1억 3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여수산단의 에이치엔지케미칼(주)은 지난 2022년 한화솔루션과 GS에너지가 총 59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태양광 모듈용 시트 소재(EVA) 생산 기업이다. 현재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초기 인력난을 적극 해결하도록 지원 시책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 광주시, 공정·자율·소통 ‘감사혁신 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용 감사대상 선정 기업 불편 점검 등 38개 시책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자율·소통하는 ‘감사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중대비위행위는 엄정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감사 절차와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38개 시책을 수립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며 소통하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내부 비리나 유형, 시민 불만사항과 안전 위험요소

등을 수집·분석해 감사 대상과 분야를 선정한다.

또 기업·기관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점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 감사와 유사기관 병합 감사를 도입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 신청 자격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 직접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 도입,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무기명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감사 전반에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시, ‘택시부제’ 재추진... 국토부 심의 신청

“차량 과잉 공급·경영난 심화”

광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제한 없는 운행으로 인해 업계가 경영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부제’ 재추진에 나선다.

광주시는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하루 차량 운행량을 조절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체증 완화, 근로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해제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차량 과잉 공급,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

소 등으로 고사할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는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광주시는 택시업계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택시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준공식

이삼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서 강진원 군수 등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강기정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올해 안 답 내야”

“회담 요구 답 없어 답답한 상황” 무안지역민에 ‘설득 편지’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상태인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올해 안에 답을 내야 한다”며 “무안지역민에게 설득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16일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주·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공항 등 이미 전국은 거점공항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4일 무안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마련 토론회’를 통해 소음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무안지역민에게 보여줬다”며 “무안 지역민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열렸

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소음대책 토론회를 통해 군공항 최적지로 무안공항 민간활주로에서 1.9km 떨어진 무안군 망운·운남 2개면이라고 공개했다.

소음피해지역은 2개 지역과 현경면으로 분석돼 광주시는 이전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을 1조원 규모로 책정하고 신재생 에너지단지, 스포츠아카데미, 국제학교, 공공기관 이전, 농축산 전용판매장 설치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소음대책 토론회에 이어 무안 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 원탁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등에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이미 중부권엔 청주공항, 남부권엔 가덕도신공항, 동남권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서남권엔 전북 새만금공항 등 거점공항의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민간·군 통합공항 무안이전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원탁회의, 3자 회담, 2자 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대화 테이블 요구에 답이 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만 광주시는 지난 해 12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무안지역민을 설득하기 위해 특히 이전 예상부지 지역에 거주하는 현경면, 망운면, 운남면 지역민께 ‘설득의 편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전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7개 기업 선정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7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 전략 목표, 신시장 개척 노력 등 서류·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달 수

출지원협의회 심사·의결을 통해 7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5000만달러 수출액을 수상한 김 가공 전문기업 대창식품(목포)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제조 전문기업 칸플랜트(영암) △개폐기·차단기 등 전력기기 연구 개발 기업 스위코진광(나주) △국내 재생타이어 전문제조기업 대호산업(함평) △종합계측기기 전문기업 협성히스코(순천) △계면활성제 제

조 전문기업 에스에프시(여수) △장류 전문 명문장수기업 매일식품(순천)이다.

오는 2025년까지 해외마케팅과 지식재산 역량강화, 타깃 국가별 판로 전략 수립 등 수출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구·개발(R&D), 금융, 수출보증보험 등 지원·우대를 통해 도비 포함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25개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3.6%(342억원), 수출액 7.6%(2700만달러) 증가, 정부 연구 개발 과제 3개사 선정(54억원)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곽지혜 기자